

한국민주화운동의 이념사에 나타난 사회정의의 이해

‘죽은 자들’과 ‘찢어진 자들’의 말에 대한 기억

최치원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논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이념사, 즉 한국 민주주의와 관련된 사회운동을 이론적 철학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던 각종 자료와 연구서 등 출간물의 *휴머니즘적 사유*의 전개사에 담겨 있는 사회정의의 의미를 탐구한다. 휴머니즘적 사유로서 민주화운동의 이념사는 총체적 의미에서 한국의 현실 전반에 대해 근본적 반성을 요구했고, 정의로운 인간의 삶의 문제에 관한 윤리의식과 시민연대를 자극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대한 *공통 감각*을 찾아내고 형성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본 연구가 한국 민주화운동의 이념사, 즉 휴머니즘적 사유의 전개사 속에서 중점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은 부당한 사회가 어떻게 고발되고 있는지, 인간의 존엄과 품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희망과 비전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벤야민(Walter Benjamin)적 표현을 통해 형상화시키면, 이 작업은 잔해들로 수북이 뒤덮여 쌓인 과거의 재앙 속에서 ‘죽은 자들’을 깨워주고 ‘찢어진 자들’을 꿰뚫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은 자들’과 ‘찢어진 자들’이 현실에 어떻게 분노하고 저항하고 있었는지, 이들이 실현되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

고 이들 스스로가 표현할 수 없었던 욕구와 희망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공분 혹은 공감할 얻어내고 있었는지가 사회정의의 맥락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말’과 이들을 대변해 주었던 ‘말’이 기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오늘날 한국 현실에서 점점 퇴색되어 가는 사회정의의 의미를 되찾아 보고자 한다.

■ 주요어: 사회정의, 정의, 민주화, 박정희, 유신체제, 공동감각

1. 문제제기

사회정의는 사회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근본 규범으로서 정치학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는 사회과학과 철학 일반의 핵심개념들 중의 하나에 속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운동 그리고 특수하게는 민주화운동의 이념사 속에 나타난 사회정의의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이해와 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의 대한 전망의 폭을 넓혀주는 데 있다. 필자는 여기서 민주화운동의 이념사를 한국 민주주의와 관련된 사회운동을 이론적 철학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던 각종 자료와 연구서 등의 출간물에 담겨 있는 *휴머니즘적 사유*의 전개사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이념사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휴머니즘적 사유의 전개사를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유는—이것은 행위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즉 사유는 하나의 행위이며, 반대로 행위는 하나의 사유이다—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현실에 분노하고 대항했던 실제 행위자들의 사유 행위(사유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관찰자로서 이들 행위자들의 사유와 행위를 다시 텍스트 속에서, 다시 말해 *말* 속에서 재현하는 사유

행위(사유 행위²⁾)이다.¹⁾ 텍스트, 즉 말 속에서 사유 행위¹와 사유 행위²는 가다머(Hans-Georg Gadamer)가 이해하듯이 하나의 지평으로 융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융합의 전제는 현재와 과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통 감각(sensus communis)²⁾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5·18민주화운동에 직접적으로 그 정신적·이념적 토대를 두고 있는 1980년대의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는 한국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풍성하고 역동적인 이념사를 전개시켰다.³⁾

한국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이념사, 즉 휴머니즘적 사유의 총체적 전개사라는 맥락에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 사유(사유 행위¹과 사유 행위²) 속에는 부당한 사회에 대한 고발, 인간의 품위와 존엄에 대한 갈망, 현실에 대한 비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겨져 있다. 이 모든 것은 전체 한국 사회에 정의를 적용하려는 요구와 정의로운 국가와 삶의 모습을 형상화시키려는 노력이었다. 휴머니즘적 사유로서 민주화운동의 이념사는 총체적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특정 시기에 한정되지 않았고, 한국의 현실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했다. 그것은 역사의 의미가 무엇이며 권력자들에 의해 역사가 얼마나 부당하게 다루어졌는지를 상기시켰고, 정의로운 인간의 삶의 문제에 관한 윤리의식과 시민

-
- 1) 행위가 완성된 이후에, 이러한 행위를 정리하기 위해 사유가 나타날 수도 있고, 행위 과정 중에 이러한 사유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 2) 가다머는 ‘공통감각’의 의미를 정신과학(오늘날의 의미로 인문학)의 측면에서 재정립하고 특히 시민의 건전한 판단력으로서 그 개념이 갖는 사회적·정치적 중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있다(Gadamer 1990(1960), 24-40).
 - 3) 5·18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하는 1980년대 이후로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많은 저항 행위와 사회운동이 있었고, 이러한 행위와 운동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뒷받침하려는 (특히 사회주의운동의 이론과 역사에 관해서) 많은 서적들이 출간되었다. 운동이든 이론이든 간에 그것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전면에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사회에서 억압받는 집단들, 특히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도시 주변부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연대를 자극시켰다. 민주화운동의 이념사는 사회정의에 대한 공통 감각을 찾아내고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중요한 것은 정의 일반 혹은 사회정의의 문제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넘어,⁴⁾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이념사 내지는 휴머니즘적 사유의 전개사 속에서 어떻게 현실의 문제가 재현되고 있었는지, (부당한 것으로 이해되는) 현실을 당사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현재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어

4) 민주화의 맥락에서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지영의 연구는 사회정의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개념보다 정의라는 보다 포괄적이고도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문지영 2007). 이 논문보다 1년 전에 출간된 정태현의 논문 역시 정의라는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정태현의 논문은 정의를 한국의 민주화와 민족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자 노력으로 이해하고,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출발하여 해방을 거쳐 그 이후의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인문화적으로 성찰했다. 그러나 실제 민주주의 내지는 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 속에서 포착될 수 있는 사회정의의 문제는 소홀히 처리되어 있다(정태현 2006). 이병훈의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해 나타난 노동의 양극화 문제(이것은 보다 포괄적인 맥락에서 분배정의의 문제와 연관된다)를 진단하고,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담론으로서 (위기에 처한) 사회정의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민주화운동의 맥락이 빠져 있다(이병훈 2005).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논문이 정재각의 연구이다. 이 논문은 사회정의라는 구체적인 개념을 사용하지만, 그것을 단지 경제적 배분의 맥락에서 고찰하고 있다(정재각 2006). 윤선자의 연구는 사회정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주의의 발전의 맥락에서 사회정의에 관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윤선자 2002). 함세웅의 연구는 1970~80년대의 상황을 사회정의의 종교적 실천이라는 맥락에서 간략하게 잘 정리해 주고 있다(함세웅 1984). 윤순진의 연구는 한국의 원자력발전이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지를 보여주고, 이러한 상황이 갖는 사회정의적 함의를 제시해 주고 있다(윤순진 1006). 홍응표의 연구는 일제시대부터 1980년대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사회정의의 의미를 추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문학작품 속에 사회정의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 있는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이다(홍응표 1990). 홍찬숙의 연구는 사회정의의 문제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데, 단지 순수이론에 대한 탐구에만 머물러 있다(홍찬숙 1998). 승계호는 사회정의의 문제(즉, 사회가 정당하나 부당한가의 문제)가 인간들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간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이것이 ‘미래의 사회정의’ 개념이라고 주장한다(승계호 1996). 사회정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는 “자연계를 통째로 깨트려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현대소비사회(승계호 1996, 27)”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다.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사회정의의 문제를 논의한 것이 김도종의 논문이다(김도종 1995). 그는 변화무쌍함으로 인해 항상 갈등과 불화의 가능성이 표출되는 정보화 혁명시대에서 사회정의의 기준은 이성, 덕성 그리고 감성(욕구)의 영역에 있어서 균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면 의미를 갖는지가 탐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탐구는 실천적 의미의 공통감각을 되찾고 재구성한다는 취지에서 보더라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탐구는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벤야민(Walter Benjamin)의 말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잔해들로 수북이 뒤덮여 쌓인 과거의 재앙 속에서 “죽은 자들”을 깨워주고 “찢어진 자들”을 꿰맞추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Benjamin 1977, 255; 최치원 2006, 258-260). ‘죽은 자들’과 ‘찢어진 자들’이 현실에 어떻게 저항하고 있었는지, 이들이 실현되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들 스스로가 표현할 수 없었던 욕구와 바람은 어떻게 공감을 얻어내고 대변되고 있었는지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인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이 있기 이전에 ‘죽은 자들’과 ‘찢어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의 말을 대변해 주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한국인의 현재적 삶의 상황에 대한 성찰과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적 삶에 대한 기대는 이러한 삶이 기반하고 있는 과거의 이해로부터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를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들’과 ‘찢어진 자들’의 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현재적 입장에서 말은 과거를 기억하는 행위이다. 과거를 기억하고 상상력을 불러내어 오늘날의 한국 현실에서 점점 퇴색되어가는 사회정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되찾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어떤 규칙이나 법칙을 염두에 두고 있다든지⁵⁾ 혹은 특정의 계급이나 집단 혹은 정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

5) 다시 말해 사회정의의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본 글이 전제하는 것은, 예컨대 일목요연한 순서에 따라서, 시대 순, 사건 순 혹은 인물 순으로 (예컨대 1950년대는 대표적으로 누구,

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도식이나 개념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

2. 사회정의의 개념

플라톤의 ‘국가(Politeia)’에서 정의에 대한 관념이 전개된 이래로부터 롤즈(John Rawls)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정의가 ‘공정함(fairness)’으로 이해되기까지⁶⁾ 사회 정의의 문제는 정치·사회철학 및 사상의 중심 주제가 되어 왔다. 오늘날 정의 개념은 합법적 정치과정과 정치프로젝트를 위한 원칙으로서 사회 내의 각종의 갈등과 권리의 충돌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고, 사회의 통합과 합의를 이끌어 내고, 각종의 사회적 정치적 행위에 대해 방향을 부여해 주며, 특정의 정치 체제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한다(Meyer 2004, 35-36).

하지만 사회정의는 일목요연하게 “개관할 수 없고, 상황에 좌우되는” 특징을 갖는다. 사회정의는 두 눈을 가리고 한 손에 공평한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이 갖는 영원한 고정불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사회정의는 “치우침이 없고 공정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편을 위해 연민하기를 요구”한다(Davy 2001, 3-4). 예컨대 배고프고 병들고, 고통받고, 일 자리를 상실하고,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고, 무력하고, 박해받고, 버려진 혹은 육체적·정신적 제한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사유와

1960년대는 대표적으로 누구 등과 같이) 논의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주제별로 순위를 정해서 각각의 시대를 대표한다고 믿어지는 특정의 사건을 중심으로 놓고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6) 이 책은 1971년에 출간되었으나, 롤즈는 1958년에 “Justice as Fairness”라는 제목으로 *Philosophical Review*, Vol.LXVII에서 이에 관해 논하고 있다.

행위는 두 눈이 가려질 필요도 없고 공평한 저울을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사회정의의 면모는 감정적 호소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것의 관심사는 추상적·철학적 이념들이 아니라, 예컨대 작업장에서 인간적인 대우, 교육의 권리 보장 그리고 사회보장 등과 같은 구체적인 욕구 충족의 실현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욕구 충족이 얼마나 건전하고 충실하게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번영과 안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질을 결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정의의 문제는 민주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롤즈(Rawls 1972; 1988; 1993; 2003), 왈쩌(Walzer 1992; 1995), 드워킨(Dworkin 1981; 2000) 그리고 하버마스(Habermas 1992)와 같은 학자들은 정의와 관한 추상적 물음을 중심으로 정의의 문제에 접근해 간 대표적인 이론가들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의의 규범들은 어떻게 근거지를 수 있을까’와 같은 물음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에 관한 공통의 사변적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정의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자유일 뿐만 아니라, 동등한 삶의 기회를 의미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물론 삶의 기회는 적극적 자유라는 의미에서 일생동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더 나아가 이들은 정의를 국가와 경제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그 어떤 개인적 및 집단적 참여 기회와 동일시하는데, 이러한 생각 역시 앞서의 정의에 관한 이해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여기서도 정의의 문제는 정의의 척도들과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적용의 조건들이 규정되는 절차에 대한 성찰의 한 문제일 뿐이다(Meyer 2004, 37).

롤즈는 예컨대 주요 사회제도들이 “어떻게 기본 권리들과 의무들을 배분”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정의의 “첫째 고찰대상”이 “사회적 근본구조”라고 주장한다(Rawls 1993(1971), 23). 노직은 분배 문제와 같은 특정의 이슈에 대해 하나의 “규칙”을 가정한 뒤, “정의로운 관계로부터 정의로운 방식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한다(Nozick 1976, 144). 이상과 같은 사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요약하면, ‘사회의 근본구조’가 ‘정의로운 관계에서 정의로운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혹은 조직되어 있을 때 정의롭다와 같은 동어반복적인 결론이 되고 만다. 물론 사회정의의 문제가 어떤 규범이나 규칙을 생각하지 않고도 전적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모든 상황에 다 적용 가능한 어떤 보편타당한 규범적 원리를 찾으려는 정의 일반에 관한 고찰은 삶의 문제를 관조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한다.⁷⁾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회정의를 이해할 때 “분명히 사회라는 변동적 의미 속성에 의해 정의의 개념이 유동(流動)”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정의 개념을 지나치게 벗어나 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홍응표 1990, 238).

어찌 되었든 간에 간과될 수 없는 것은 사회정의의 문제의 중심에 구체적 사회현실의 측면이 서야 하며, 사회정의의 문제가 특정의 규범적 틀이나 이론에만 한정되어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정의를 사회정의라는 개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러한 틀이나 이론을 넘어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부정의의 문제가 이해되고 재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정의의 개념적 파악이 구체화되는 지점은, 맥브라이드의 생각을 인용하여 표현하자면 (예컨대 롤즈가 중요시하는 것과 같이) “고금을 초월해 완전[한] 또는 거의 완전한 정의로운 상태”를 밝히는 곳에서가 아니라, “현실 세계 속에서 자행되는 명백한 부정의”를 드러내는 곳이라 할 수 있다(Macbride 2006, 47).

7) 특히 정의를 단지 특정의 척도나 절차 문제에 한정시켜 이해하는 경우, 이것은 구체적 육구의 충족을 그 본질로 하는 사회정의의 개념 내용과 양립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예컨대 동등한 기회부여의 원칙(이것이 자유의 문제와 관계되든 아니면 삶 혹은 참여의 문제와 관계되든 간에)을 핵심으로 하는 정의 개념이 현실의 부정의 문제를 드러내는 (따라서 감정적 호소와 결부될 수밖에 없는) 사회정의 개념이 요구하는 정의의 내용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지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3. 한국에서 사회정의의 문제

두 가지 방법, 즉 규범적 원리에 대한 탐구를 통해 정의의 문제에 접근하느냐 아니면 사회적 현실이나 인간의 구체적 욕구를 중심에 놓고 정의의 문제에 접근하느냐의 문제가 서로 상호대립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양자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그것이 무엇에 관계되든 간에) 옳고 그르냐의 문제에 관한 지혜 내지는 이론자의 측면에서 사회정의의 문제에 접근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에서는 후자가 가진 삶의 구체성, 즉 욕구뿐만 아니라 욕구가 “필요성(Notwendigkeit)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Kusnezow 1988, 41)”되어 있다는 측면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더 나아가 전자는 후자와는 달리 권력이나 지배관계 혹은 이데올로기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⁸⁾ 맥브라이드가 롤즈식의 정의에 대한 이해 방식이 “정치를 무시”하고 있으며, “중산층의 건전한 세계관으로 여겨질 법한 것들을 규칙으로 삼고 있을 뿐(Macbride 2006, 50)”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 맥락을 짚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사회정의의 문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은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노동자 문제가 등장하는 196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사회주의 이론이 주로 일본을 통해 지식인에게 수용되고 노동자의 집단적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1920년대 이후라고도 할 것이다.⁹⁾ 해방 이후에는 한국노동운동사에서 획기적

8) 따라서 문제는 사회정의의 문제를 단지 규범적·윤리적 측면에만 국한시킴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함정을 피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앞서도 밝혔던 본 논의의 의도, 즉 한국민주화운동의 이념사로 이해되어야 하는 제1차 자료, 연구서, 출간물, 팸플릿 등과 같은 문건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한국사회에 정의를 적용하려는 총체적 요구와 정의로운 국가와 삶의 모습을 형성화시키려는 노력을 재구성하려는 의도에도 전적으로 상응한다.

9) 한국에서 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천은 실제적으로 1929년의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출발점으로 한다. 이것을 기점으로 이후 부산 방적노동자 총파업, 평양 고무노동자 총파업, 인천 노동자

전환을 만들어낸, 노동자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결성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정의의 요구가 짧지만 강렬하게 전개된 적이 있었다. 조직화된 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천 속에는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배관계와 권력관계에 저항하는 인간의 행위가 첨예하게 드러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예컨대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견지에서 우리는 당면한 정권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정권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전면적으로 참가하고 그 선두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나 혹은 “사회관계에 있어서의 봉건적 질곡이 제거되고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게 되고 문화적 발전의 기초가 보장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김양재 1987(1947), 23-24).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정의의 개념은 세계를 총체적인 모습으로 이해하는 방식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사회정의가 단지 조그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득을 얻어내는 데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경우 사회정의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삶의 조건의 향상이 인간 삶의 전체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인간 존엄이 얻어질 수 있다는 욕구이다. 둘째, 그러므로 사회정의는 기존의 사회관계의 해체와 권력장악에 대한 요구로까지 나아갈 만큼 포괄성을 갖는다.¹⁰⁾ 이러한 요구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는다. 중요한 점은 자본주의의 “큰 역사적 공적”이

투쟁, (홍남을 중심으로 벌어진) 각종의 비합법적 지하활동(예컨대 경성 출판노동조합, 서울 섬유공조합, 용산 금속노동조합, 함흥 화학공조합, 원산과 부산의 운수노동자조합 등)이 전개되었다.

10) 노동자들이 역사, 정치, 경제, 권력, 이데올로기의 전체적 관계 속에서 사회 문제를 이해하려는 방식은 사회정의의 실현 역시 전체적 맥락에서 고려된 사회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의 대다수 민중을 비참히 희생시킴으로써 가능”¹¹⁾ 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역사적 공적’이 바로 그 희생자들인 다수의 몫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전유물이 되는 상황 하에서 사회정의는 부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당함을 존속시키는 체제는 거부되거나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롬(Erich Fromm)은 휴머니즘이라는 의미에서 인간 존엄의 문제가 “물질적, 정신적 생존에 위협이 되어온 것들”로부터 인간 자신을 지키는 문제와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Fromm 1983, 13). 프롬의 생각은 사회정의를 인간 존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 하나의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것은 어떠한 형태의 생존의 위협이든 간에 이 위협은 한 개인의 개별적이고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구성원의 실존적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휴머니즘은 인간 생존과 실존의 문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이해될 수 없다는 당위를 포함하고 있다.

개별적 인간의 생존 문제는 전체 사회의 맥락에서 본다면 공동의 실존 문제가 된다. 예컨대 벨티(Felix Belti)가 적절하게 주장하고 있듯이, 한 인간이 굶주림이나 추위 등으로 고통을 받거나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것은 그 당사자 개인의 인간 존엄의 문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적 유대”라는 의미에서 다른 인간에도 관계하는 문제가 된다(Belti 2005, 288-289). 그러므로 인간 존엄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이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는 사회정의라는 말 속에는 관계라는 복수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인간이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순간 그 삶의 문제는 개별적 생존의 문제를 떠나 존재하게 된다. “전국적 공통된 견지”에서 제기된 노동자들의 주장에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삶의 영위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인간 존엄이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 욕구들이 제시되어 있다.

11) 진보당의 강령·정책은 정태영(1991, 567) 참조.

실업자와 전재(戰災)빈민에게 의식주와 직업의 보장, 8시간 노동제의 시행, 시간 외 노동에는 임금을 배액 지불, 저물가 정책의 시행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 물가등귀에 따른 임금을 인상, 부녀자에게 매월 3일간 유급 생리 휴가제를 실시, 기업 내의 스포츠, 오락, 육탕 등의 설비와 탁아소, 의료기관 등의 설비의 완비 및 이 시설들의 노동자에 의한 관리,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단체계약권의 체결, 실업자와 전재민에게 전동, 가스, 수도료 및 집세를 면제, 쌀과 일용 필수품을 배급, 군수산업을 평화산업으로 재편성, 모리배의 기업관리, 물자 방매(放賣) 착복 절대 배격(김양재 1987(1947), 27-28).

의식주와 관련된 인간의 욕구의 충족 문제는 그것이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인간적 존엄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냐라는 물음이 남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사회정의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된다. 8시간 노동제와 유급 생리 휴가제의 실시, 기업 내의 각종의 편의·복지·의료시설의 설비와 확충, 실업자와 재난자 대한 공공료 면제 등은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인간 욕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타 집단의 욕구의 충족까지를 포괄하는 전면적인 것을 의미한다. ‘모리배’를 언급한 것은 부정의와 불공정을 일으키는 주범이 부패한 기업인들이나 이들과 결탁한 행정관리들이라는 암시를 강하게 불러내고 있다. 군수산업을 평화산업으로 대체하라는 요구는 사회정의를 문제가 단지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인류보편적 생존과 실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행동강령’¹²⁾에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수준과 인간 존엄에 관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다. 우선 ‘행동강령’은 8시간 노동제, 단

12) 전평의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안태정(2001, 100-101) 참조.

체계약권 확립, 최저임금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위에서 언급된 것들과 동일하다. 여기에는 군수산업의 전환 문제와 같은 인류보편적 목적의 사회정의의 실현에 대한 이상은 빠져 있다. 노동의 문제에 관해서 ‘행동강령’은 유해위험작업은 7시간제 실시할 것, 14세 미만 유년노동은 금지시킬 것, 7일 1휴가제와 연 1개월 유급휴가제를 실시할 것 그리고 부인노동자의 경우에 산전 산후 2개월의 유급휴가제를 실시할 것을 내걸고 있는데, 구체적인 욕구의 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행동강령’은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 탁아소, 음악실, 도서관, 의료기관을 설치할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 역시 복지의 문제가 단지 기업내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 연관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사회전체와 연관된 복지라는 측면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은 실업, 상병(傷病), 노폐노동자(老廢勞動者)와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의 실시에 관한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는 오늘날의 사회정의의 문제에 관련시켜 이해해도 전혀 진부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행동강령’은 착취를 본위로 한 일체의 청구제(請負制)를 반대하고, 해고와 실업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가장 절박한 심정을 반영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정의의 문제가 단지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이 잘 먹고 잘사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공적인 내용을 갖는 이상, 이 문제는 정치적 삶의 양태로서 민주주의의 문제와도 연관이 된다. 특히 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이 집단적 활동의 자유의 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이 연관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활동의 자유가 예컨대 “미문의 백색공포[테러]에 의하여 유린¹³⁾되고 있다면, 이 문제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사회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13) 김양재(1987(1947))의 머리말. 테러의 중심은 ‘독축(獨促)’, ‘대한노련’ 그리고 우국동지회 등등의 “반동테러단”이었다(김양재 1987(1947), 92).

자유로운 행위를 가로막는 폭력과 불합리한 행위들에 반대하여 사회에 이 문제를 호소하고 저항 행위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의 맥락에서 보더라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항 행위들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구원활동” 같은 것이다. 이 활동의 “근본 목적은 모든 민주주의적 운동의 자유, 그것을 탄압하고 저해하는 일체의 법령을 철폐시킴으로써 살상, 고문, 투옥을 절멸”¹⁴⁾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정의의 문제가 민주주의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또 다른 내용은 이 문제가 욕구의 수준에 머무는 것을 넘어 정치생활의 양식으로 민주주의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근로대중” 또는 “인민대중”에 토대를 둔 “민주주의국가”의 건설의 이념을 전개시켰던 조선인민당은 이러한 노력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된다.

부녀해방과 남녀평등권의 확립,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민 사유재산의 최고한도 제정, 고도 누진세 부과와 근로층을 위한 세제의 수립, 통화 및 물가의 안정과 서민 금융대책의 수립, 주요기업의 국영화 및 중소기업의 국가 지도하의 자유경영, 8시간 노동제 및 최저임금제, 유년노동의 금지, 각종의 사회보험의 실시, 의료기관, 탁아소, 양로원 등의 국영 및 공영시설 확충, 국가부담에 의한 의무교육의 실시, 문명퇴치 및 사회교육의 촉진, 학술 및 교육기관의 확충, 건설한 대중오락기관의 설립·확충(김종범·김동운 1983(1945), 56-57).

14) “검거, 고문, 투옥, 사상, 질환, 빈궁 등으로 신음하는 모든 해방운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구원과 위문, 통신, 접견, 독서의 자유, 검거고문 절대반대, 모든 민주주의적 정치범의 즉시 석방, 암흑재판 반대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구원운동 당면의 현실적 내용이다(김양재 1987(1947), 123).

더 나아가 인민당은 당시에 노동자들의 구체적 욕구였던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나 근로시간 및 복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평화산업의 실현
 문제나 실업자 및 전재(戰災)자에 대한 구제책 등을 포괄하는, 당대에 가
 장 세련화된 욕구의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다(김종범·김동은
 1983(1945), 57-59).¹⁵⁾ 특히 ‘부녀해방과 남녀평등권의 확립’ 문제뿐만 아
 니라 (국가지도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유경영’ 문제와
 ‘서민 금융대책’ 및 ‘건설한 대중오락기관의 설립·확충’의 문제 등은 사
 회정의의 실현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주
 고 있다. 교육 문제의 해결을 ‘사회교육’과 ‘의무교육’ 그리고 교육기관
 의 확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주장은 그것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육의 측면에서도 사회정의의 실
 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¹⁶⁾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정의는 자유, 생존, 평화, 복지, 교육에
 대한 욕구를 표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삶의 실현이다. 좋은 삶에 대한 기대는 인간 욕구의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총괄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시대나 상황을 떠나
 욕구의 심층부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것이 된다.¹⁷⁾ 좋은 삶이 부정

15) 인민당은 “인민대표대회 소집과 헌법제정” 그리고 만 20세 이상 남녀의 “선거권 및 피선거
 권”의 확립 문제를 정책의 첫째와 둘째 조항에 제시하고 있다. 건준 및 건국동맹의 후신이었
 던 40년대의 조선인민당은 노동자들이 원했던 사회정의(즉 충족하기를 원했던 구체적 욕구
 의 수준)를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가장 잘 반영하고 있던 단체였다고 할
 수 있다.

16) 1945년 해방정국에, 조선공산당 서울시 중앙위원회가 뿌린 ‘격(檄)’이라는 제목의 빠라는
 교육 문제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주고 있다. ‘격’은 일제의 교육제도와 문화정책이
 잔존해 있고 민족반역자들이 “동포에 또다시 노예교육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새
 조선의 민중을 위한 교육제도와 문화정책을 확립”할 것과 “전 동포에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부담의 9개월 이상의 의무 교육
 실시,” 구태의연한 교육인들을 문화와 교육의 “책임적 지위에서 축출,” “학원의 자치,” “연
 구의 자유,” “학생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 보장이다(심지연 엮음 1986, 113-114).

17) 철학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욕구가 갖는 구체적 의미가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

되었을 경우, 그것은 사회정의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은 다시금 좋은 삶에 대한 욕구를 보다 강력하게 추동한다. 즉 이러한 일련의 사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에서 전개되는 ‘명백한 부정의’에 대한 반대체제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회정의의 문제이다. 부정의한 사회에 대하여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전태일의 예는 현실에 대한 분개와 보다 좋은 삶에 대한 욕구가 사회정의를 이해하는 핵심적 내용을 이룬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태일은, 그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휘황찬란한 물질문명의 베일”속에서 그리고 “밤이 되면 형형색색의 네온싸인이 불야성을 이루고 자동차의 행렬이 불야성을 이루는 도시의 소음(조영래 1991(1983), 211)” 속에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충족되어야 할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그는 오직 성장과 업적만을 쫓고 있던 비인간적인 한국사회에 대해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외쳤다. 그는 “[각성된] 밑바닥 인간의 사상”과 “완전한 거부, 완전한 부정으로 전화된 사상” 그리고 “행동의 사상(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 1983, 156-160)”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사회정의의 실현을 향한 그의 사유와 행위를 여기서 언어로 다 풀어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단지 강조될 수 있는 것은 그가 꿈꾸었던 사회의 구체적 모습이 어떻게 형상화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아마도 “형식상 명목상 자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선량한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명량한 사회”¹⁸⁾는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빈곤과 불평등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근본적 침해이며, 따라서 사회 정의에 대한 요구는 이에 대한 투쟁을 필연적으로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 투쟁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위한 보

는 각주 23)의 본문 내용을 참조할 것.

18) 진보당의 강령·정책은 정태영(1991, 567) 참조.

다 공평한 재산의 분배를 향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 맥락에서 강조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가치가 노동에 있으며, 삶의 에토스가 이러한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의 상실은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의미에서 수입의 중단, 따라서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됨의 품위가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유럽에서 사회철학적 사유의 전통은 인간이 노동하는 곳이 “전적으로 인간이 되는 지점”이며, 따라서 노동의 상실은 당사자에게 아주 깊숙한 심리적 상처를 주는 “비인간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간명한 공식을 만들어 내었다(Lepenies 1994, 29). 이런 의미에서 사회정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 하는 논리가 된다. 사회정의는 이 맥락에서 본다면 근본에 있어서는 사회문제, 즉 노동자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며, 사회정의는 바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과정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정의의 실천과정은 단지 노동자에만 국한시켜 이해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노동자이나 아니냐의 구분은 사회정의의 문제가 함께 하는 인간들 혹은 ‘같은 인간적 유대’라는 의미에서 전체 인간과 관계하는 문제가 될 때 의미가 더 이상 커다란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인간적 유대라는 측면에서 사회정의에 관한 의미 있는 내용은 예컨대 지학순의 생각에서 확인될 수 있다: “... 부패한 무리들이 여당과 야합하여 제대로 야당 구실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중의 올바른 힘을 모아 떳떳한 민주적 힘의 집단체로서 필요 시에는 민중의 힘을 과시하며,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의 횡포를 최대한도로 막고, 이 나라의 주권을 보호하는 통제세력이 있어야 하겠다고 느껴왔다.”¹⁹⁾ 지학순의 입장보다 더욱 격렬한 것이

19) “카톨릭 주교라는 지위에 있는 내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패분자들이 자행하는 불의를 당했는데 [불의란 당시 원주교구장이었던 지학순 주교가 원주 문화방송국의 부정부패 문제를 시정하러다 좌절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말함] 일반 서민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억울한 무수한 서민들을 대표해서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교회

박형규의 입장이다. 그는 1974년에 출간된 『해방의 길목에서』라는 책에서 국가를 정면으로 겨냥해 다음과 같이 외쳤다: “교회는 첫째로 국가를 향해 그 행동이 합법적으로 국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라]고 묻는다. 즉 국가의 국가로서의 책임을 ... 묻는다. 둘째로 교회는 국가의 행동에 희생이 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 셋째로 교회는 국가라는 차에 깔려 희생이 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뿐 아니라, 그 차를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박형규 1974, 54).”²⁰⁾

그러나 박정희의 눈에 인간적 유대를 실현하고, 국가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람들은 그저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의 적으로서 제거되어야 할 사람들일 뿐이었다. 즉 그의 생각에는 사회정의의 개념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 그는 긴급조치 1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1971년 11월 21일에 있는 국민투표에서 유신헌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고, “불행하게도 국가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는 일부인사들과 불순분자들은 작년 말부터 부질없는 선동과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시키면서 사회혼란을 조성하여 헌정질서인 유신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하려 들고 있

가 자기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도시 주변의 하수구와 같이 권력층에 썩은 물이 범람하는 꼴을 보고도 말 못하는 교회라면 교회는 죽은 교회라 생각한다.” 이처럼 지 주교는 ‘창조(1971년 11월호)’에 사회정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경향잡지 1977/03(통권 1548호), 77, <http://www.albummaniac.com/gallery/view.asp?seq=57807&path=&page=79>). 이러한 생각이 전개된 것은 전태일의 분신 1년 뒤였다.

20) 박형규의 문제의식은 ‘부패한 무리들이 여당과 야합하여 제대로 야당 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가 정치인들의 ‘횡포’로 얼룩져 있다고 진단한 지 주교의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박형규의 『해방의 길목에서』가 출간된 같은 해 여름, 지학순은 유신헌법이 “민주헌정을 배신적으로 파괴하고 국민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폭력과 공갈과 국민투표라는 사기극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진리에 반대되는 것(카톨릭뉴스 2009/02/20 <http://www.na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317>)”이라는 양심선언을 계기로 구속된다. 그의 선언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는 1974년 1월 8일의 대통령 긴급조치 1호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었다. 그는 박형규가 외쳤던 것, 즉 ‘국가’를 향해 그 행동이 합법적으로 국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다”²¹⁾고 주장하고 있다(한승헌 1984, 5).

그에 의해 고안된 국민교육헌장 어디에서도 사회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 ‘자유’와 ‘권리’는 단지 ‘상부상조’와 ‘협동정신’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장식품일 뿐이었다. 박정희는 (그리고 그의 생각을 개념화했던 박종홍과 안호상 같은 지식인들은) 한국인이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을 가진,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인간이 되길 원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은 현실 사회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었다. 곧 보겠지만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을 가진 인간은 ‘능력’과 ‘질서’ 그리고 ‘공익’이란 이름으로 강요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가운데 찢어지고 죽어가고 있었다.

사회정의의 문제가 단지 잘 먹고 잘사는 문제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다. 인간적으로 대우받는 것이 거부되거나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회정

21) 지학순의 구속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탄생 계기가 되었다. 정의구현사제단의 탄생을 둘러싼 당시의 상황은 사회정의의 문제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양심과 인권의 원칙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학순의 구속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신부들의 원주 모임에서 한 신부는 모임의 목적을 “정치행위야 어찌 되었든 성당 안에서 신자들을 향해 착하게만 살라고 떠들 수는 없었습니다[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 다른 신부는 “우리는 장관이나 국회의원해서 정권을 잡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인권이 존중되는 정치, 특권층만 잘살지 않고 국민 모두가 잘사는 정치를 해달라는 것뿐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유일웅 1984, 91-92). 성당은 사회정의의 보루로 인식되어졌다. 특히 김수환 추기경을 중심으로 하는 명동성당은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인권’과 ‘자유’ 그리고 ‘정의’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수환 추기경은 1970년대 말 근로자를 위한 한 기도회 강론에서 “경제체제의 구조, 기능, 환경” 등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태롭게 만들고 “조직적으로 사람의 책임성을 무디게” 만들며 인간 각자의 “주체성의 표현을 방해”할 경우, 그 경제체제가 아무리 높은 부를 창출하고, 또 그 부가 “정의와 공평의 기준에 의하여 분배”된다고 해도 그 경제체제는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교황 요한 23세의 말을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이 한국의 현실을 빗대어 비판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버리고 있는 비인간성을 지적해서, 비록 그것으로써 수출이 커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근로자들에게 부의 혜택이 고루 나누어지는 경우일지라도 그 경제구조, 기능, 환경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인간을 생산의 도구화 내지 노예화시키면 비인간적이며, 정의에 위배된다는 말씀입니다(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엮음 1985, 398).”

의는 무너져 버린다. 인간의 개념이 하나의 기계로 이해되는 한, 그 결과는 찢어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산이다. 1970년대 후반에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과 YH무역 노동조합운동을 둘러싸고 나타난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여름 날”에 동일방직의 직공들은 ‘저희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숨이 턱에 닿도록 탁하고 더운 공기는 우리에게 폐결핵을 선물해 주기가 일쑤며, 무좀은 1-2년만 근무하면 당연시되어 오고, 가려움을 참을 수 없어 시멘트 바닥에 미친 듯이 문지르고 피가 흐르는 발을 보고 울음을 터뜨릴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밤잠 못자고 배를 졸이며 번 돈은 병원에 갖다 바치고 … 약값을 위해 또 숨덩이와 싸워야 하는 근로자들이 수출실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가, 불필요할 땐 여지없이 잘라 버리는 회사가 과연 복지회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엮음 1985, 48).”

그런데 민주노조를 지키려고 투쟁하는 이들 여직공들을 향해 회사의 사주를 받은 남성 노동자들이 똥물을 투척했다. 그래서 이들은 ‘저희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배우지 못해 아는 것은 없지만 결코 불의와 타협할 수 없었고 가난하게는 살아왔지만 똥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 100억불 수출되어 국가발전 눈부시고 기적적 경제성장이 찬란한 사회를 향해 순수한 꿈을 키워야 할 어린 나이의 저희들이 *우리도 사람*이라고 외친 그것은 똥물을 뒤집어 써야할 만큼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엮음 1985, 155)”²²⁾

동일방직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눈부신 ‘국가발전’과 ‘기적적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실적의 도구’가 되어 똥물을 뒤집어쓰는 순간까지도 결코 불의와 타협하기 원치 않고 인간으로서 살아가길 원한다는 욕구였다.

욕구는 특정의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의도로부터 비롯되는 “주관적”인 욕구와 “모든 시대에 모든 인간집단들에게서” 드러나는 “근본 욕구”로 이해되는 “객관적” 욕구라는 두 가지 계기를 포괄하고 있다.²³⁾ 그러나 욕구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분석적 이해를 넘어 사회정의의 맥락에서 욕구의 본질이 무엇이나에 대한 대답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즉 중요한 것은 욕구가 어떤 형태를 가지든 그것이 사회라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 표출될 때, 인간으로 대우받으며 살아가겠다는 욕구로 구체화된다는 점이다. 유신체제의 종말의 서곡을 알렸던 YH무역 농성사건 중에 경찰의 폭력에 떠밀려 추락사를 당한 김경숙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적으로 대우받는 것이 어떻게 거부되는지, 그럼에도 인간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집 주인이신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당장 낱팜팔이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야만 하셨다. 없는 가정에서 어렵게 어머니의 수고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졸업하기 직전 겨울방학 때부터 공장에 취직을 하였을 때 돈에 구애를 받던 나 자신은 이 가난한 우리 가정이 잘 살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내가 배우지 못한 공부를 동생에게 가르쳐서 동생만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 이곳(서울)에서 내 힘닿는 데까지 힘써 살아가리라고 다짐했다. 하청공장에 취직을 하여 말만 들던 철야작업을 밤낮(없이) 하면서 약 2개월은 나의 코를 건들지도 못했

22) *이탈릭체* 강조는 인용자.

23) 주관적 욕구는 객관적 욕구가 시간이나 공간 혹은 인격에 따라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욕구이다(Fenner 2007, 116).

다. 너무나 피곤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코피가 나는 것이다. 나의 몸은 더욱 약해지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어떤 회사에서는 봉급을 약 3개월치를 받지 못했다. 헐벗고 굶주리며 풀빵 5원짜리 30원어치로 추위에 허덕이며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다. 차라리 자살이라도 해버리려고까지 마음을 먹었으나 고향이 그 길을 막았다. 하청공장에서는 작업관계로 일요일이 없었다 … 젊고 싱싱한 나이에 우리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장 안에서 여러 형태의 억압을 받으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혼탁한 먼지 속에 웅덩대는 기계소리를 들으며 어언 8년 동안 공장생활을하는 나 자신을 볼 때 남는 것은 병 밖에 없다. 몸은 비록 병들었지만 마음은 상하지 않은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리**라 다짐한다(YH노동조합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엮음 1984, 217-218).”

“되돌아보는 것이 다행스럽기 보다는 착잡한 느낌”이 들고 “기억마저 희미한 … 악몽같은 사건들(함세웅 1984, 35)”이 연속되었던 1970년대의 사회정의의 문제가 주로 노동자 문제에 집중되어 제기되었다면, 1980년대에 그것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측면에 걸친 양상으로 나타났다. 즉 1980년대에는 자유, 사법부의 독립, 불법연행·구금·고문, 언론 및 여론 조작, 돈의 권력화, 빨갱이 논리, 사인화된 권력 및 권력의 야합, 남녀간의 불평등, 풍요속의 빈곤, 농촌의 황폐화, 도시개발의 논리와 생존권 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노동자 문제와 결합되면서 기존 체제와 지배관계도 까지도 부정하는 사유와 행위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 상황을 호프만(Werner Hofmann)의 말을 빌려 표현한다면, “사회적” 사유의 추진력인 “희망과 현실의 대립”²⁴⁾이 그만큼 더 커졌다고 할

24) 사회적 사유는 주로 세 가지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무정부주의, 둘째, 마르크스(Karl Marx)·엔겔스(Friedrich Engels)의 『공산당선언(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1848)에서 결실을 맺게 되는 초기(공상적) 공산주의와 급진적 사회개혁 내지는

수 있다. 현실은 인간의 존재방식을 조건짓고, 희망은 이러한 존재방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 속에서 싸이 튄다. “‘운동’과 ‘과학’의 치열한 만남 (김대환 1990, 12)”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 1980년대의 무수히 많은 논쟁들은 현실과 희망의 간극의 정도를 반영해주고 있었다. 논쟁은 역사(특히 근·현대사)에 인식, 미국에 대한 인식, (민중 혹은 민족)문학·예술의 의미, 한국의 국가와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방법, 한국의 사회성격·계급구성·사회구성체에 대한 인식 방법, 노동운동의 노선, 금융실명제, 여성해방의 방법, 국가의 교육정책과 ‘참교육’ 문제, 김일성 주체사상의 의미, ‘민중불교’ 개념, 대통령선거 투쟁의 방법, 통일운동의 방법, 온산 공업단지의 공해로 인한 ‘온산병’의 실태, 헌법개정, 국시(國是), 5·18민주화운동과 5공 청산, 영호남 간의 지역감정, 의료보험의 실행 방식, 호주제 중심의 가족법 개정, 무노동·무임금, 방송 민영화, 언론기본법,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인식 등 인간 삶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영역에서 광범위하고도 전면적으로 벌어졌다.

중요한 점은 사회정의의 맥락에서 이러한 논쟁의 저변을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고 옳지 않은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자 하는 일종의 공통 감각의 문제가 논쟁의 심층부에서 관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감각은 직접적으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역사의 심연 곳곳에서 망각되어 있던 **옳음**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는 과정으로부터 나온 공통적(common)인 것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반역사적 방향을 바로 잡으려는,”²⁵⁾ 다시 말해 사회

초기 사회주의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방향은 친밀한(verwandt) 연관을 갖는다(Hofmann 1979, 12-22).

25) ‘반역사적 방향을 바로 잡으려는’이라는 말은 백낙청이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던 4·19의 거(혹은 4·19혁명)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구절이었다(백낙청 1983, 33). 이 구절은 4·19의거에만 한정되어 사용될 필요가 없으며, 1980년대의 모든 사회운동 그리고 5·18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의 의미를 지칭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정의의 실현을 위한 총체적 요구를 수반하고 있는 판단이었다. 한국에서 1980년대 민주화를 위한 사회운동을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대대적인 이념사의 전개가 가능했던 이유를 사상적 철학적 맥락에서 설명한다면 이러한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는 흔히 민주주의라고 이해되는 특정의 제도나 절차의 실현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이해되곤 한다.²⁶⁾ 이러한 이해는 인간의 삶과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인간의 고민과 사유의 폭과 깊이가 갖는 의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이해 속에서 제도나 절차에서 벗어나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 그리고 희망은 (민주주의가 바로 이러한 제도와 절차의 수준에서만 이해되는 한계로 인해) 단지 ‘추상적’인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러나 사회정의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고민과 사유는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것이다. “민주화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기치를 내걸은 ‘불교조계종 승려 1백 52명 시국선언(1986/05/09)’에는 사회정의와 관련된 민주화의 핵심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의미 있는 구절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종교적 맥락을 떠나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나라는 단 한 번도 민주주의를 실현해 보지 못한 채 독재에 신음해 왔다. 장기적인 독재는 권력자와 눌린자, 부자와 빈자, 억압자와 저항자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했고 국민적 통합은 상실되었다. 더욱 독재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통로와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권력의 제반장치를 통해 통제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끝없이 높아가고 있다. 의사표현의 극단적 형태인 분신과 자살이 노동현장, 농촌, 거리, 학원에서 속출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악순환을 초래하는 공방전이 가속되고 날이 갈수록 인명의 피해만 더하고 있다.”²⁷⁾

26) 최장집의 연구(2002)가 이러한 이해의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독재는 권력자와 눌린자, 부자와 빈자 그리고 억압자와 저항자의 극단적 상황을 양산해 내고, 더 나아가 사회의 각 영역에서 분신과 자살을 강요하는 체제이다. 이 점에서 독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형식적인 의미에서 그저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체제가 된다. 즉 독재는 민주주의에 반대되기보다는 실질적 의미에서 본다면 민주화에 반대되는 체제인 것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눌린자와 빈자 그리고 저항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분신과 자살이 사회 곳곳에서 강요되고 조장되고 있는 한, 다시 말해 이 모든 상황이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한, 민주화는 오늘날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한국사회가 아직도 ‘어두운 시대’에 놓여 있는 한,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아직 ‘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4. 맺는 말

본 논의는 인간의 이론적, 실천적 그리고 휴머니즘적 사유와 열정 그리고 노력을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재구성하고자 했다. 재구성의 중심에 개인적 주관적 경험이 있었다. 주관적 경험은 (과학이라는 이름하의) 객관적 ‘이론’의 틀에 가두어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능하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의 ‘말’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그리고 ‘찢어진 자들’의 좌절된 희망과 이들을

27) “생명의 존엄을 가장 큰 이상으로 하는 불교도로서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을 불러일으키는 자살과 타살은 중지되어야 하며 이런 결과를 야기하는 반민주적 요소의 척력을 촉구한다. 그들의 분신과 죽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책임이며, 그들의 아픔에 승가의 실천 지성으로서 우리는 크나큰 책임을 통감한다(신동아 1990, 166).”

대변해 준 ‘말’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했다.

본 논의에서는 1980년대에 절정에 이르렀던 민주화운동이 사회 정의를 이해하는 데 갖는 의미를 여러 가지 제약으로 상세히 다룰 수가 없었다. 단지 그 의미를 간략하게나마 요약하자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욕구들, 예컨대 사회적 갈등과 불균형을 치유하고, 야만적 고문을 청산시키며, 비인간적 교육을 시정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말하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와 같은 욕구들은 오늘날 날에도 사회정의의 문제를 이해하는 핵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다. 그리고 이 당시에 출간되었던 서적들, 팸플릿, 연구서 등에 담겨 있는 이론적, 실천적인 휴머니즘적 사유 속에는 사회적 약자들 및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 및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려는 열정과 노력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공통감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판단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열정과 노력은 그리고 ‘말’의 형태로 남아 있는 한 기억되고 공통감각은 되찾아질 필요가 있다. 그것들은 사회질서를 인식하고 비판하는 힘이자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 내지는 비전을 전개시키게 하는 계기들이기 때문이다.

앞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정의의 문제가 반영하고 있는 인간의 삶의 구체성과 욕구는 그것을 어느 하나의 규범적 틀이나 이론에 가두어 놓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이다. 이것을 간명하게 표현한다면 아마도 “최소한의 인간임을 확인받고 싶었고 … 권리를 보장받고” 싶었다 혹은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싶었고 국민으로서 주권을 확인받고” 싶었다(신동아 1990, 67, 69)는 욕구가 아닐까 한다. 사회정의의 문제는 추상적인 이론이나 철학으로 다룰 수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 현실에 토대를 둔, 인간 삶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정의의 문제가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유럽에서 왜 19세기 중반

이후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²⁸⁾ 오늘날 사회정의는 다양한 사회 집단의 정치적 입장들 속에서 근본규범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사회정의의 문제를 단지 특정 계급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한, 사회정의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추적해 가는 것은 힘들 것이다. 사회정의의 문제는 빈곤으로부터 탈피라는 고전적인 사회정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교육의 권리, 여성의 역할 및 지위향상, 전반적 사회보장, 인권 문제 그리고 오늘날에는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들과 관계하고 있다. 사회정의의 문제가 너무나도 다양한 인간 삶의 영역에 걸쳐 있다 보니, 하이에크 같은 극단의 시장지상주의자는 사회정의가 특별히 이렇다고 할 만한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하는 일종의 ‘쪽제비와도 같은 언어(Wieselwort)’라고 하여 그 의미를 근본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Hayek 1996, 124-127).

사회정의의 문제가 오늘날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가 어떤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사회의 현실은 이러한 낙관과 희망을 긍정하기에는 너무나 비관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 근래에 발생한 세 가지 사건들이다. 하나는 집안 형편으로 인해 고 3때 삼성전자(온양 소재)에 취직해 반도체 검수 업무를 맡다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투병하다 23살의 나이로 숨진 박지연 씨(2010/03/31)의 예이다.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온양공장에서 일하다가 박지연 씨처럼 급성 불

28) 즉 이 시기에 산업화 및 근대화의 부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사회문제’로 제기 되었다. 고전적 의미에서 사회문제는 ‘노동자 문제’였으며, 사회정의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 하려는 실천적 노력 속에서 구체화되었다. 이 시점에 조직화된 노동운동이 등장하게 되고, 자유주의의 이념에 반대해서 그리고 모순에 찬 자유·평등이라는 프랑스 혁명이념에 반기를 들고 사회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주의 이론, 통칭 사회적 사유라고 개념화될 수 있는 이념들이 전개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치병에 걸려 유명을 달리한 사람은 당시에 그녀를 포함해 8명이었다. 두 번째 예는 현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부정부패를 질타하고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라는 유서를 남기고 낙동강 독방에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 소신한 문수 스님(2010/05/31)이다. 세 번째 예는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임무창(2011/02/26) 씨의 가족 이야기이다. 한창 사회를 위해 열심히 생활을 해야 했을 44세의 나이에 그는 유명을 달리했고, 그의 아내는 남편의 해고 이후에 생활고로 인해 우울증을 겪다가 이미 자살을 한 상황이었다. 쌍용에 취직해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가족을 일구어 왔던 이들이 자식들에게 남겨준 것은 통장 잔고 4만 원과 카드 빚 150만 원이었다. 쌍용의 해고된 노동자들 가운데 현재 임무창 씨를 포함해 13명이 자살했다.

‘죽은 자들’ 혹은 ‘찢어진 자들’은 말이 없다. 살아 있는 자들은 이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말을 대변해 주어야 할 텐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암담하다. 한국사회는 너무나 사회정의로부터 벗어나 있다. 앞서의 언급을 잠시 상기시킨다면, 여전히 눌린자와 빈자 그리고 저항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분신과 자살이 강요되고 조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한국 사회가 독재의 상황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사회정의는 언제든지 ‘사회관계의 역사적 사회적 변화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열려진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의 내용은 채워지고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사회정의의 문제가 추상적인 논의와는 거리가 먼 주제이며, 항상 정의의 문제와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의의 문제를 현실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이해할 때 구체화되는 문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본 논의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사회정의의 개념은 몰즈나 그 밖의 이론가들이 이해하듯 그 스스로 혹은 이미 완결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실의 부정의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안티테제로 자신을 정립한다는 것이다. 사회정의는 안티테제로서 존재할

때 (불완전하나마) 실체에 대한 실재 혹은 실재적으로 파악된 실체를 의미하는 하나의 개념이 된다. ~~이다~~

참고문헌

- 4월회. 1993. 『사월의 소리: 4·19 민주이념을 실천하는 사람들』.
- 5·18기념재단 역음. 2007.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기념재단.
- 강만길 외. 1983. 『4월혁명론』. 한길사.
- 격동의 역사 속에서, 김수환 추기경.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http://www.na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317).
- 고성국 외. 1991.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 김 원. 2003. “여공담론의 남성주의 비판.”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 김금수. 1986. 『한국노동문제의 상황과 인식』. 풀빛.
- 김금수·박현재 외. 1985. 『한국노동운동론 1』. 미래사.
- 김낙중. 1984. 『한국노동운동사: 해방 후 편』. 청사.
- 김대환. 1990. 『80년대 한국사회 대논쟁집: 사회과학의 시대, ‘운동’과 ‘과학’의 치열한 만남』. 중앙일보사.
- 김도중. 1995. 『생산양식의 변동과 사회정의』. 역사와 사회.
- 김동춘. 1988. 『1960,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대항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 김삼웅. 1984. 『민족민주민중선언』. 일월서각.
- 김윤환·김낙중. 1970. 『한국노동운동사』. 일조사.
- 김윤환 편. 1978. 『한국노동문제의 구조』. 광민사.
- 김태일. 1991. 『한국의 농민운동과 국가 1864-1990』.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동아일보사. 1990.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신동아 1990년 1월호 별책부록).
-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역음. 1985.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사』. 돌베개.
(근로자를 위한 기도회—김추기경 강론(1978/03/20)).

- _____. 1985. 『동일방직노동조합운동사』. 돌베개.
- 맥브라이드, 윌리엄(MacBride, William L.) 2006. “마르크스적 사회정의와 부활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시대와 철학』 17-1.
- 명동천주교회. 1984. 『한국카톨릭인권운동사』. 명동천주교회.
- 문지영. 2007. “한국의 민주화와 “정의” 담론.” 『정치사상연구』 13-2.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6.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자료관 편. 2000. 『한국민주화운동의 구조와 전개』. 성공회대 출판부.
- 박태균. 1995. 『조봉암 연구』. 창작과 비평사.
- 박현재 외. 1984. 『한국사회의 재인식』. 한울.
- _____. 1985. 『한국자본주의와 사회구조』. 한울.
- 박형규. 1974. 『해방의 길목에서—박형규 목사 논설집』. 사상사.
- 배순길. 1995. 『한국사회주의 정당사』. 한마음.
- 백낙청. 1983. “4·19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성.” 『4월혁명론』. 한길사.
- 신동아. 1990.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 운동(1월호 별책부록)』. 동아일보사.
- 안승천. 2002. 『한국노동자운동, 투쟁의 기록: 전태일에서 민주노총까지』. 박종철출판사.
- 윤선자. 2002.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종교계의 역할: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2-3.
- 윤순진. 2006. “사회정의와 환경의 연계, 환경정의: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와 운용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기.” 『한국사회』 7-1.
- 윤일웅. 1984. “유신정권과 정의구현사제단.” 『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 춘추사.
- 이병훈. 2005. “노동 양극화와 사회정의.” 『한국사회』 7-1.
- 이승희. 1994. 『한국현대여성운동사』. 백산서당.
- 이영석. 1983. 『죽산 조봉암』. 원음.
- 이우재. 1991. 『한국농민운동사연구』. 한울.
- 전 YH노동조합·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엮음. 1984. 『YH 노동조합사』. 형성사.

- 전남사회연구소편, 1988. 『5·18광주민중항쟁자료집』. 도서출판 광주.
- 전태일기념건립위원회 편, 1983.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돌베개.
- 전태일기념사업회 편, 1991. 『한국노동운동 20년의 결산과 전망』. 세계.
- 정재각, 2006. “한국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 사회정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과학논총』 16-2.
- 정태현, 2006. “인문학—역사학과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정의.” 『한국사회』 7-2.
- 조영래, 1991(1983). 『전태일 평전』. 돌베개.
- 조희연, 1990.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 최장집, 1985.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한울.
- _____. 2002.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 최치원, 2006. “근대에 대한 하나의 사변: 동북아 평화문제의 의제화를 위한 하나의 시론.” 『철학연구』 31. 고려대 철학연구소.
- 편집부, 1990. 『학생운동논쟁사』. 일송정.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3.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민중사.
-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편, 1986. 『한국사회발전과 민주화운동』. 정암사.
-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I-V』. 동광출판사.
- _____. 『1980년대 민주화운동 VI-VIII』. 동광출판사.
- 한국기독교협의회, 1984. 『1970년대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
- 한승현, 1984. 긴급조치와 긴급인권—1974년 1호 발동부터 4호 해제까지. 『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 춘추사.
- 함세웅, 1984. “1970년대 가톨릭 사회정의구현 활동과 평가.” 『가톨릭 사회연구』 3.
- 홍응표, 1990. “문학과 사회정의.” 『비평문학』 4.
- 홍찬숙, 2008. “사회정의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검토—성인지적 사회통합의 문제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8-2.

Acham, Karl (Hrsg.). 2005. *Soziale und kulturelle Herausforderungen des 21. Jahrhunderts*.

- Wien: Passagen-Verlag.
- Baum, Hermann. 2004. *Theorien Sozialer Gerechtigkeit: politische Philosophie für Soziale Berufe*. Münster: Lit.
- Belti, Felix. 2005. *Behinderung und Rehabilitation im Sozialen Rechtsstaat: Freiheit, Gleichheit*. Tübingen: Mohr Siebeck.
- Benjamin, Walte. 1977. *Über den Begriff der Geschichte, Illuminationen*. Frankfurt a. M.: Suhrkamp.
- Davy, Benjamin. 2001. "Die Unvollendete Stadt: Diskurse der Gerechtigkeit im 20. Jahrhundert." (Vortragsmanuskript, März 2001)([http://www.raumplanung.uni-dortmund.de/bbv/web/de/textonly/content/fuer_sie/pics/00%20BD%20Diskurse%20der%20Gerechtigkeit%20\(Vortrag\).pdf](http://www.raumplanung.uni-dortmund.de/bbv/web/de/textonly/content/fuer_sie/pics/00%20BD%20Diskurse%20der%20Gerechtigkeit%20(Vortrag).pdf)).
- _____. 2001. "Schafft Raumplanung Soziale Gerechtigkeit?" (Manuskript nach einem Vortrag für die "Festwoche der Österreichischen Raumplanung" aus Anlaß des 30-jährigen Bestehens der Studienrichtung Raumplanung an der Technischen Universität Wien([http://www.raumplanung.uni-dortmund.de/bbv/web/de/textonly/content/fuer_sie/pics/00%20BD%20Diskurse%20der%20Gerechtigkeit%20\(Vortrag\).pdf](http://www.raumplanung.uni-dortmund.de/bbv/web/de/textonly/content/fuer_sie/pics/00%20BD%20Diskurse%20der%20Gerechtigkeit%20(Vortrag).pdf)).
- Dworkin, Ronald. 1981. "What ist Equality? Part 2: Equality of Ressources." *Philosophy & Public Affairs*, No 10.
- _____. 2000.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Fenner, Dagmar. 2007. *Das Gute Leben*. Berlin: Walter de Gruyter.
- Gadamer, Hans-Georg. 1990 (1960). *Hermeneutik I. Wahrheit und Methode,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J.C.B. Mohr: Tübingen. 6. Aufl. (durchgese).
- Habermas, Jürgen. 1990.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Untersuchung zu Einer Kategori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Frankfurt a. M.: Suhrkamp.
- _____. 1992.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Rechts und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Frankfurt a. M.: Suhrkamp.
- _____. 1996. *Die Einbeziehung des Anderen. Studien zur Politischen Theorie*. Frankfurt

- a. M.: Suhrkamp.
- Hayek, F. A. V. 1996. *Die verhängnisvolle Anmaßung: Die Irrtümer des Sozialismus*. Tübingen: J.C.B. Mohr.
- Hofmann, Werner. 1979. *Ideengeschichte der Sozialen Bewegung*.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 Horster, Detlef (Hrsg.). 2004. *Sozialstaat und Gerechtigkeit: Hannah-Arendt-Lectures und Hannah-Arendt-Tage 2004*. Weilerswist: Velbrück Wiss.
- Koller, Peter. 2001. *Soziale Gerechtigkeit. Begriff und Begründung*. Wien(<http://www.univie.ac.at/juridicum/forschung/wp24.pdf/>).
- Kusnezow, Wassili. 1988. "Zu den Philosophischen Auffassungen von Karl Marx und Friedrich Engels über das Wesen und die Arten der Bedürfnisse." *Marx-Engels-Jahrbuch* 11. Berlin, 39-72.
- Lepenes, Wolf. 1994. "Wäre ich König, so wäre ich Gerech." *Gerechtigkeit: Ein Schlüsselbegriff in den Gesellschaftspolitischen Auseinandersetzungen der Gegenwart*. Leo Montada (Hg.). *Arbeitslosigkeit und Soziale Gerechtigkeit*. Frankfurt/New York: Campus Verlag. 9-33.
- Merkel, Wolfgang. 2001. "Soziale Gerechtigkeit und die drei Welten des Wohlfahrtskapitalismus." *Berliner Journal für Soziologie*, Vol.2. 135-157.
- Meyer, Thomas. 2004. *Die Zukunft der Sozialen Demokratie*. Toennes Druck + Medien, Erkrath (Herausgegeben für die Friedrich-Ebert-Stiftung).
- Nozick, Robert. 1976. *Anarchie, Staat, Utopie*. München: Moderne Verlags Gesellschaft.
- Rawls, John. 1993 (1971). *Eine Theorie der Gerechtigkeit*. Frankfurt a. M.: Suhrkamp.
- _____. 1993. "Gerechtigkeit als Fairness: Politisch Nicht Metaphysisch." Honneth, Axel (Hrsg.). *Kommunitarismus. Eine Debatte über die Moralischen Grundlagen Moderner Gesellschaften*. Frankfurt a. M./New York: Campus. 36-67.
- _____. 1998. *Politischer Liberalismus*. Frankfurt a. M.: Suhrkamp.
- _____. 2003. *Gerechtigkeit als Fairness. Ein Neuentwurf*. Aus dem Amerikanischen von Joachim Schulte. Frankfurt a. M.: Suhrkamp.

- Thole, Werner, Peter Cloos, Ortman, Friedrich, Volkhardt Strutwolf (Hrsg).
2005. “Soziale Arbeit im öffentlichen Raum: Soziale Gerechtigkeit in der
Gestaltung des Sozialen.” Hans-Uwe Otto Zum 65. Geburtstag.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Walzer, Michael. 1992. *Sphären der Gerechtigkeit. Ein Plädoyer für Pluralität und
Gleichheit.* Frankfurt a. M.: Campus.
- _____. 1995. *Toward a Global Civil Society.* Oxford: Berghahn Books.

투고: 2011.4.4 심사: 2011.5.2 확정: 2011.5.10
